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의미와 영향

작년 7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무역관리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적인 소재·재료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8월 초에는 수출관리상 우대 조치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수출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수출관리강화 혹은 수출관리 적정화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결과,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백인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미 국가들만 남게 되었다. 일본은 이를 의식하였는지 한국을 제외하면서 화이트 리스트라는 용어를 그룹 A국가로 변경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9월에 WTO에 제소하는 한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시켜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수출규제 1년이 지난 올 7월 초에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은 1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6월 24일자 중앙일보는 「일본공격에 일본이 당했다... 수출규제 1년, 한국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관련 기업은 신속하게 소재 공급처 다변화와 소부장의 국산화에 나섰고, 정부는 핵심소재 육성 정책으로 뒷받침하여 한국의 대일 의존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즉 수출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는 국산화에 성공하는 한편 조달처를 중국 및 미국으로 확대하였고,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 기업으로부터 새롭게 조달하는 한편 미국 듀폰사의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불화 폴리이미드는 국내 기업의 국산화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일본이 잠자고 있던 한국을 깨웠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일본 내에서의 평가도 초기의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수출규제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올 5월에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불화수소 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납품 물량을 원상 복구시켜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6월에는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탈일본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산하 일본총합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시작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일본으로의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맥주를 비롯한 일본 제품의 한국 내 판매가 현저히 줄었으며, نيسان자동차와 유니클로 계열의 GU가 한국에서 철수했다는 뉴스는 국내에도 자세하게 소개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기업의 손해가 더욱 컸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수출규제 조치 발표 직후 국내 언론에서 예측한 시나리오를 기억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의외로 느껴질지 모른다. 당시 국내 언론, 특히 경제신문을 포함한 보수언론은 ‘한 달 내 반도체 공장의 가동 중지’, ‘한국의 피해가 일본보다 300배 더 크게 됨’, ‘한국의 GDP 증가율 대폭 하락’, 심하게는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 등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추측·과장 보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원문) 특히 경제신문을 포함한 보수언론이 반도체 공장이 한 달 내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한국의 피해는 일본보다 300배가 더 클 것이다, GDP 증가율을 대폭 하락시킬 수 있다, 심하게는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등 의도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추측·과장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삼성전자·LG전자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수출 일본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언론의 예상과 달리 ‘시장’은 그 조치의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언론의 이러한 보도에 의문을 품고, 수출규제의 의미를 분석하는 글을 작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다(『한일 경제분업 관계의 역사와 대한 수출규제의 의미』, 『역사비평』 2019년 겨울호). 그 글의 결론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고, 궁극적으로 일본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국제적 환경변화란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화와 기술진보에 의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확대되고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가 변화하여, 소수 기업과의 장기적이고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에 바탕을 둔 일본식 비즈니스 시스템의 우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특히 전자·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한일 기업의 경쟁력은 역전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의 완성품 제조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일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용 및 효율 면에서 일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즉 현재 전자·반도체 산업에서 나타나는 한일 분업관계는 한국이 일본에게 자본재·중간재 공급국의 위치를 강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 한국 기업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던 1980년대까지의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단행된 수출규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국산화, 조달처 다변화 노력에 의해 필연적으로 대일 의존이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최근의 양상은, 필자의 분석과 예상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토레

지스트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이 품목은 대일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고 단기간에 국산화도 어려운 품목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대로 벨기에로부터 조달처를 새롭게 확보했는데, 그 벨기에 기업은 일본기업인 JSR과의 합작기업이었다. 또한 도쿄오카코교(東京 化工業)는 한국에서의 생산시설을 늘리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은 최대 납품처인 한국 기업에 대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우회수출과 현지생산 확대라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본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출규제 정책을 일본 정부는 왜 단행했을까? 한국 보수언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 의문과 관련된 흥미로운 글을 최근에 발견했다. 작년 8월, 즉 수출규제 조치 직후 가네코 마사루(金子勝) 게이오대학 명예교수가 한 경제잡지에 기고한 「대한 수출규제는 역사문제의 정쟁에 무역을 끌어들이 ‘실책’이라는 글이다. 이 글에서 가네코 교수는 “아베 정권은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역사수정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내셔널리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 점에서 정경분리라는 전통적인 일본의 통상정책과 다르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몰락에 책임이 있는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한국에 ‘화풀이’ 하려고 수상 주도의 이러한 저급한 외교에 동조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관료의 화풀이는 좀 극단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내셔널리즘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특이했다.

주류 경제학에서 보는 차별은 단순한 비선호가 아니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사람·집단을 배척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 행동하는 한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차별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심리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은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교정하기 힘들다고 본다. 앞서 소개한 가네코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은 한국에 대한 전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출규제 정책을 지지한 71%의 여론이(요미우리신문, 2019년 7월 22~23일 조사), 수출규제가 ‘단기간에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혹은 ‘적어도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수출규제의 영향이 분명해지면서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수출관리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라도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도쿄신문의 6월 4일자 사설은, 이러한 ‘합리적’ 사고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규제가 역사수정주의라는 심리적 편견에 의한 차별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전공 분야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나 전망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의 사견은,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인상 혹은 감상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내 반일 여론을 악화시킨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지인들은 “역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야”라는 반응을 보이며, 지금까지 가능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자고 주장하던 필자를 조롱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놀라움은, 리버럴 성향의 일본 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작년 여름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만난 한 지인은 수출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필자에게 “수출관리 체제가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면 되지 않는가, 왜 무조건

수출규제라고 단언하는가?”라고 반문하여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차원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는 부정확한 한국 관련 뉴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겨울에 만난 한 일본인 대학교수는, 한국에서 일본 맥주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폭동’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하여 말문이 막힌 적도 있다. 한때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을 당연시하던 한국에서의 풍토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처럼 수출규제 조치는 역사문제에서 기인한 양국의 갈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일과 혐한이라는 대중의 지지에 기댄 정책은 실시하기는 쉬워도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양국 모두 소탐대실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화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아사히 신문의 7월 2일자 사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도 WTO에 대한 제소를 재고하고 강제징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역대 정권의 견해를 고려하여 강제징용공들과 직접 대화하여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가 법적으로 모두 끝났다고 버티는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예전의 지배국이 역사문제를 겸허하게 대하지 않으면 한국의 여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설에서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순서는 분명하다. 일본 정부가 먼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여인만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